

201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기반구축사업
보고서

사업책임자 :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서울대-화동사대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통일

한반도 시대의

한·중 관계



서울대-화동사대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주제: 통일 한반도 시대의 한·중 관계

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10: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개 회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前통일평화 연구원장)	4
제1라운드. 한중 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사회: 백지운 교수]	7
한중수교의 역사과정	선즈화: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8
한중수교과정 중 중국 외교전략 재검토	동지예: 중공중앙당교	9
한중문화 교류와 역사적 교훈	리샤오지에: 산둥대학 공상학원	11
18세기 청조 서적사 교류와 융합	자오청지에: 원난대학 역사 및 당안학원	12
제2라운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 관계		13
1970년대 상반기 남북관계 긴장완화의 역사과정	량즈: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13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	천보: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14
냉전기 미국의 대한 경제/군사 원조의 특징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15
위계로서의 미일한 안보 삼각관계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7
오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	좌장: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9

제3라운드. 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의 전망	[사회: 천보 교수]	32
평양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와 지속	류밍: 상하이 사회과학원.....	32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변화와 선군정치	이상숙: 국립외교원.....	34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모델은 존재하는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36
제4라운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반도의 역할		39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신옥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39
G2의 신화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2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지경학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44
동아시아 충돌 지점의 전이	이정훈: 서울대 중문과.....	47
오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	션즈화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원장)	49

개 회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화동사범대 주변국가연구원이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아직은 이르지만 북한의 변화는 향후 동북아의 정세를 크게 바꿀 것이라 생각된다 있다. 그런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통일한반도 시대의 한중관계’로 정했다. 원래는 임경훈 원장께서 개회사를 하실 예정이었는데 지금 연변대에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 중이라 오후에 참석하실 예정이다. 그래서 정근식 전 원장께 환영사를 부탁드립니다. 정근식 선생님은 통일평화연구원과 주변국가연구원의 협력관계 체결과 한중평화협력포럼 기획 과정을 함께 하셨다.

정근식: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하신 선즈화 선생님, 류밍 선생, 량즈, 동지에, 천보, 리샤오지에, 자오칭지에 교수 모두 환영한다. 그리고 신욱희, 손인주, 이상숙, 박태균, 이정훈, 김성철, 김병로 선생님 모두 반갑다. 지금 중국 연길에서 두만강 포럼이 개최 중이고 거기에 통일평화연구원의 임경훈 원장이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게 되었다. 작년 선즈화 선생이 통평원에 오셔서 특강을 하시고 저와 백지운 선생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을 방문하여 통평원과 주변국가연구원이 의미 있는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오늘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로 했던 주평 선생이나 위웨이민 선생이 못 오셔서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의 회의에서 중요한 학술적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통평원은 오랫동안 한중포럼을 개최해왔는데 그 주 파트너는 베이징의 학자들이었다. 중국은 큰 나라이고 또 베이징과 다른 학풍이 있다. 특히 상하이의 셴즈화 선생이 이끄는 연구팀은 현재 중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하이와는 특별히 전략적인 대화의 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 2018년은 2017년과 매우 다른 상황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중간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의 마무리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이끌어가는 형국이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제에 누가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외교적 물밑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확실히 ‘전쟁’이나 ‘통일’ 같은 단어보다는 ‘평화’라는 단어가 더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그 배후에 어두운 갈등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 당사국들의 협력, 특히 한중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중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셴즈화 선생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을 기대한다. 한중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데 오늘의 논의가 한중 사회에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랜만에 격식 차린 학술대회가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속깊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중평화협력포럼이 향후 양 기관 간에 더 깊은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국과 한국 학자들과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백지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정근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니 양쪽 패널 소개를 간단히 하겠다. 제가 앉은 순서대로 한국 패널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김병로 선생님은 통평원 소속 교수이시고 북한 사회를 전공하고 있다. 어제 연길 두만강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오늘 회의를 위해 하루 일찍 귀국하셨다. 북한 학자들과도 대화를 하고 오셨을 것 같다. 이상숙 선생님은 외교안보연구원에 계신다. 북한의 정치체제 연구자이다. 신육희 선생님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하신다. 손인주 선생님

은 서울대 정치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중국 정치외교 전공자시다. 이정훈 선생님은 서울대 중문과 교수로 중국의 지식담론을 연구하신다. 김성철 선생님은 서울대 통평원 교수로 국제관계와 핵문제 전문가이다. 박태균선생님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직 중으로 한국현대사를 전공하신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대 통평원 교수로 중국 현대사상 전공자이다.

선즈화:

그럼 중국 패널들을 소개하겠다.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전 소장인 류밍 교수를 소개한다. 1996년 서울대에서 반년 지냈으니 여기 사정에 대해 잘 알 것이다. 화동사대 량즈 교수는 한국현대사에 대해 박사논문을 썼다. 최근에는 미얀마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문제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많다. 중앙당교 동지에 부교수는 북중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내 학생이다. 화동사대 천보 교수는 냉전시기 한미관계에 대해 박사논문을 썼다. 자오청지에 선생은 지금 서울대 중문과에서 박사후 과정에 있다. 한중 중세 서적 교류에 대해 박사논문을 썼다. 리샤오지에 선생은 산둥에서 오셨다. 고대사와 세계사에 대해 연구한다. 마지막은 나 본인인데 소개를 생략한다.

제1라운드. 한중 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백지운:

오늘 회의는 격식을 최대한 생략하고 내실 있는 토론에 집중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 속에서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가장 안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한중학자들이 모이는 회의는 굉장히 많지만, 언론의 제약이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양쪽이 허심탄회하게 깊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은 많지 않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의 회의가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는 가급적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언론에는 더욱더 공개하지 않는다. 여기 모인 패널들께서 최근 현안은 물론 냉전시대의 역사까지 포함하여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깊게 들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리를, 짧지만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오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에 각 패널들께 상대방에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지를 부탁드렸고 그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 대체로 보면, 중국 패널들이 주신 사전 질문은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구조 및 한미일 동맹의 구조,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중(對中)정책의 연동성,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을 보는 한국의 시각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특히 한미동맹의 구조와 역사, 내부 모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패널들은 북중관계의 역사와 향후 전망, 북미관계의 향후 변화에 대한 중국의 시각, '일대일로' 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변화, 중국과 주변 약소국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대해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전

질문지 교환을 통해 서로가 궁금한 것에 대해 대체적인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안다.

이제 각 패널들께 사전에 제출하신 발표 개요를 중심으로,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10분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아울러 동시통역이 진행 중이니 중간 중간 간격을 두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 네 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었다. 오전세션 1, 2라운드 진행사회는 제가 맡고 라운드테이블 좌장은 김병로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다. 오후 세션 3, 4 라운드 사회는 천보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선즈화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다. 그러면 1라운드 첫 발표를 선즈화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선즈화:

한 달 전 발표 개요를 제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중관계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과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매년 이 포럼을 열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는 장기적인 연구과제이다. 그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한국과 중국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위기 해결을 주도한다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한중관계이다. 이것이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중관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냉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냉전 발발의 주요 원인은 대국 간의 충돌이었다. 대국 간의 충돌이 없었더라면 한반도 내부의 갈등은 충분히 지역 내에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대국 관계는 바로 미중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중관계가 협력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중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한반도 문제도 이에 따라 해결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좌우하는 것은 한중관계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 양국의 지리적 위치, 양자관계의 오랜 역사, 그리고 현재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 등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선 한중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는지 살펴보자. 1970년대부터 한국이 수교의사를 밝혀왔지만 중국이 이를 외면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봉쇄를 벗어나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는 것이 더없이 절박했는데, 그

최상의 돌파구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다.

중국에게 한중수교는 중국이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국제적 환경이 1990년대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중 양국은 표피적인 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다. 사드문제도 표면적 문제에 불과하다. 전략적으로 볼 때 경제 마찰도 한중관계의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한국에게는 안보와 경제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도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토론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동할 수 있는 채널이 세 개가 있다. 정부, 민간 그리고 학자 간의 교류이다. 정부 간의 교류란 매우 어렵다. 교류의 시점,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수시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민간 교류는 비이성적인 면이 있고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단점이 있다. 학자 간 교류는 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다. 양측 학자들이 자유로운 학술교류를 통해 상대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결과를 정부 관계자들이 참조하여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에 학자들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동지에:

방금 션즈화 교수께서 거시적 시각에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지금부터 나는 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즉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이라는 시각에서 한중수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나의 연구 분야는 북중관계이고 주로 경제원조에 대해 공부했다. 최근 개혁개방 후의 중국과 한반도 관계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한중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 한중관계의 출발점을 알아야 지금의 한중관계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한중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주로 한국의 시각에서 쓴 것이었다. 중국의 시각을 분



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나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한중관계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많은 한국 학자들이 이미 밝혔듯,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에 이르는 시기 양국은 조심스레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한에서 가급적으로 경제, 문화 및 체육 등 비공식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갔다. 이는 당시에는 북중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전략적 의미가 한중 경제교류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동력이 생기기 전까지 한중관계는 실질적 진행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88년이란 시점의 중요성이다. 1988년에 이미 중국은 한중수교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당시 중국이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 덩샤오핑은 대 한국 관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에 산둥성, 랴오닝성 등지에서 한국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관련 조치들이 나왔다. 그 결과 1988년 접촉의 시도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셴즈화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한중관계가 큰 발전을 보인 것은 1989년 천안문 사태 후였다. 그 이유는 중국 내부에서 매우 큰 요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첫째는 서방의 대중국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마 한중수교 뒤에는 대 중국 제재를 풀어준다는 조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동유럽 국가와 소련이 북한과 수교한 것도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둘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였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중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은 한중 무역의 경제적 가치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중국은 한중 무역의 전망에 대해 처음부터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양자교류를 추진해 나가면 그 경제적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 여러 지역에서 개혁이 난관에 봉착하자 일부 지역, 특히 한국과 인접한 산둥, 랴오닝 등지가 수교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측컨대, 지방 정부가 보인 적극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개혁개방이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수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큰 모티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보다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관계에 북중관계, 미중관계, 중일관계 등 복잡한 관계들이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지도층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서로 충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결정은 지도층 내부의 알력 다툼의 결과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리샤오지에:

내 연구주제는 세계사이다. 세계사의 중요한 연구방법은 소통과 비교이다. 국가와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사회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나는 세계사 연구자의 시각에서 나 자신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결합시켜 한중 문화교류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한중 문화교류는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양국 간 문화교류가 중단된 적은 드물었다. 한중교류는 국가, 학계, 재계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유학, 방문 등 개인적인 차원도 있다. 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류의 능동성이다.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상대방을 주된 교류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중 두 나라 모두 가장 중요한 교류 대상은 미국, 유럽, 일본이지 상대방이 아니다. 둘째는 교류의 심도이다. 다양한 형식의 교류가 있지만 심도는 깊지 않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상은 주로 드라마나 한류에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중국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학술적 측면에서도 양국의 가장 중요한 교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과 신라 간에 긴밀한 문화교류가 있었다. 지금과 대조적인 것은 당나라 전 시기에 걸쳐 일본이 총 13차례의 견당사를 파견했고 신라는 7세기에만 50여 차례의 견당사를 보냈다. 즉 당시 동아시아에서 당의 국제적 지위가 일본보다 높았던 것이다. 당과 신라의 문화교류는 지금의 한중교류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교류는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문화 교류의 성과는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교류의 경계를 확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양국 간의 교류는 언제나 다자적이고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측면을 지니므로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류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셋째는 보다 깊이 있는 교류가 있어야 한다. 감각만 자극하는 피상적인 콘텐츠보다는 상대방의 가슴에 와 닿는 깊이 있는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상호인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양국 간의 언어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오청지에:

나의 연구 주제는 18세기 한중 학자의 교류와 서적교류이다. 특히 홍대용에 집중하고 있다. 홍대용의 『담헌집(澗軒集)』에는 당시 중국과 조선 학자들의 서적 교류에 관한 풍부한 기록이 담겨 있다. 또 18세기 중엽 중국의 주문조(朱文藻)가 쓴 『일하제금합집(日下題襟合集)』이라는 책에도 양국 교류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이 책에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다. 첫째, 상대방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둘째, 어떤 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책에 들어있는 글귀를 남겼다. 마지막은 학술적인 토론이다. 주문조와 홍대용은 1767년부터 1769년까지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눴다. 홍대용이 베이징을 방문하면 필담 형식으로 소통했다. 그는 필담을 통해 왕창(王昉), 팡원서(彭元瑞) 등 청나라 주요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에 관한 풍부한 필담 자료가 남아 있어 훗날의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다음으로 서적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양국 간의 서적 교류는 기나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청대의 서적 교류는 대체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중국에서 공포된 법률에 관한 서적, 둘째는 <전당시>, <고금도서집성>과 같은 전집류, 셋째는 역사서적 등이다. 이들 서적들은 해상과 육로를 통해 유통되면서 동아시아에 서적 교류의 서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서적 교류에는 조금 전 리샤오지에 선생님이 지적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 서적 유통은 주로 청나라에서 조선으로의 수출이었고 조선 서적이 청나라로 건너가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선의 서적들 중 청나라에서 민감한 정치적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양국 간 종속관계를 어지럽힐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2라운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 관계

량즈:

내가 보기에 2018년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남북한의 긴장완화이다. 역사적으로 남북 간 최초의 긴장 완화는 1970년대 초기에 이루어졌다. 그 배경으로 첫째, 미소 데탕트가 있었다. 둘째, 외부적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푸에블로호 사건, 비무장지대 긴장 가중 등 한반도 안에서는 잦은 충돌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한국의 대미 신뢰 저하와 북한의 대 소련 신뢰 저하라는 상황이 생겼다. 세째, 경제와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실력이 엇비슷했다. 실력의 격차가 크면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강한 쪽과 관계 개선을 원치 않을 텐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실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 발표가 사람들에게 더 희망을 주었다. 그 효과는 실망스러웠지만.

대략 1974~1975년에 이르러 남북한 관계 개선의 보폭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1) 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의 동기가 서로 엇갈렸다. 남한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자체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북한은 중미 간의 데탕트를 이용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압박하려고 했다. 2) 양측 모두 대외관계에서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했다. 한국은 중국, 소련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북한도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원하면서도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렸다. 3) 양측의 국내정치가 남북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남북 간 관계 개선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한국에게는 박정희의 집권에 적지 않은 압력이 되었다. 박정희가 독재의 길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선전이 준 압박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게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대폭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오늘날의 한반도 긴장완화는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적어도 예전처럼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대폭 개선시킬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많은 일들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천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군사관계에 관한 것이다. 기밀해제된 미국 문서들이 말해주듯, 195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배치했고 1960년대 중기에 950기에 달했다. 1991년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주한미군 사령부에 의해 배치되었다.



많은 문서 연구가 밝혀냈듯, 미군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결정에 한국 정부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활용 가능한 미국 자료가 아직도 많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역사과정을 샅샅이 파헤치려면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한 문서의 기밀해제에 미국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문서에서는 그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연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당시 상황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재한 핵무기 배치가 3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 이들의 사정거리는 모두 1,000km내로 제한되어 있어 주로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다. 육지에 배치한 핵미사일 외에, 미국의 핵잠수함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항구에 정박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잠수함이 입항한 구체적인 시간과 원인이다. 예를 들어 1979년과 1980년에 입항의 회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 두 해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특수한 시기였다. 문서를 통해 입증할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추측컨대 당시 주한 미군 군축 협상 및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아마도 미국이 핵무기 배치를 통해, 일어날지 모를 한국의 정치변동에 대응하려고 했던 듯하다.

그렇다면 한국 핵무기 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 배치로 인해) 1960-70년대 안보 지출을 줄이는 대신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핵배치가 한반도 대치국면을 지속화했다. 핵무기가 배치된 상황에서 분단의 극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

박태균:

여기 오신 중국학자들은 제가 과거에 한중관계나 한미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시는 것 같다. 또한 한국 문헌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으신 것 같아 앞으로 활발한 교류와 토론이 기대된다. 한미관계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셨듯 한미관계의 주요 측면은 역시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이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당연한 것이다. 특히 미군정의 수립이라든가 한국전쟁의 발발, 또 한미상호조약 그리고 그 이후 정전체제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서 미국이 중요성이 드러난다.

또 1970년대 초까지 계속된 미국의 군사 원조와 197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무기 판매 등 한미관계에서 군사안보적 측면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미관계에서 경제적 측면이 강조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한국의 OECD, WTO가입 이후 한미간의 무역관계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경제적 문제가 군사안보적 문제 못지 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에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FTA 개정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군사 안보가 중심이었고, 그 이후에는 경제 관계 중심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한미관계는 시작부터 경제적, 재정적 문제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고 이것이 군사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와서 우리가 한미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최근 한국정부의 공개자료들을 보면 1970년대 중후반부터 한미간에는 무역문제가 많이 제기었다. 1980년에는 지적재산권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한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협정을 맺은 국가이다. 그것이 1986년인데, 미국이 왜 한국을 지적재산권 협정을 맺은 첫 당사국으로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아직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건대, 군사안보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의 발표에서 나온 바 한중관계가 군사안보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같이 봐야 한

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1950년대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것만큼 중요했던 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환율 문제였다. 환율을 맞추는 문제 자체가 미국에 대한원조와 직결되었고, 이것이 또 미국의 아시아 환율정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환율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 쪽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의 부담을 일본에 넘기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한일국가관계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경제개발 원조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원조 없이 어떻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정책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닉슨은 주한미군의 전면철수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워터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 문제가 되었던 것이 1990년대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1971년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었다. 1992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대표가 군사정전이 일어나면서 철수하는 것이 1990년대 상황이고, 1970년대 초에는 한국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이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닉슨행정부가 직면했던 재정적 경제적 위기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말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일어났다. 1971년 닉슨 정부 들어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키고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특히 면직물에 대한 쿼터제가 실시되었다.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 이런 닉슨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면 데자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지난 6월 산둥대학에서 발표할 때도, 미국 정부가 내부의 경제적 위기, 미국 정부 자체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방법, 그리고 공화당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정책의 특징에 데자뷰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후 카터 행정부에서는 3자회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안다. 1979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의외로 한미간의 이슈가 인권문제가 아니라 3자회담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미국이 중국 정부에 이런 사실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전까지는 무역문제 보다는 대한원조나 군사문제를 통한 미국정부의 재정문제라 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1970년대 중반부터는 무역문제가 한미간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갔다. 예컨대, 미국의 어느 학자는 1980년 미국정부가 왜 시민

정부보다 새로운 군사정부 손을 들어줬느냐고 할 때, 북한의 위협이나 한국의 사회 안정보다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현안의 마찰을 완화하는 것을 약속 받는 대가로 군사정부를 지지 해준 것 아니냐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만, 문서상으로도 보더라도 이 시기부터 무역문제가 군사안보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된 듯하다. 이런 토론이 1990년대부터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이 추진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등이 이슈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했던 아이젠하워, 닉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화당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인 듯하다. 반면 민주당은 대외정책에서 개입을 강화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 물론 부시 행정부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군사안보 측면과 경제재정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한미관계를 좀더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성철:

한미일이 아닌 미일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 미, 일 관계가 특별한 위계관계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위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첨예한 내적 갈등의 측면에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 경비 분담 등 동맹국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들을 했다. 동맹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받으려면 경비 분담을 제대로 하라는 것. 경비 분담(burden sharing) 문제는 트럼프 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줄곧 중요한 문제였다.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은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삼각관계이다. 한미, 미일 두 동맹이 있고, 일본과 한국은 동맹 관계가 아닌 그냥 파트너십이니까, 그 사이에 분쟁의 요소가 담겨 있다.

한미일 위계관계에는 미국, 일본, 한국의 순서이고 물론 미국이 위계의 최상에 있다. 미국은 이 삼각관계를 통해 소련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전략과 동시에 내부를 통제하는 데 활용했을 것이다. 즉, 미국은 북일관계, 한중관계에 대해 레드라인(red line)을 그어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일본이 미들파워(middle power)였나. 일본의 경제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틀 지워 놓은 전략원조의 핵심에 일본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원조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원조에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발언권이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언제나 우세

(upper hand)를 지니고 있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문제를 다룰 때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는 일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서 특히 한일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전략범주에서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일한 안보삼각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 중국의 부상 같은 강대국의 변화도 있지만, 내부의 변화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당이 힘을 잃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도 국내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1996년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되었다. 1996년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큰 변화는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생각하는 경비의 부담이랄까, 안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고리가 끊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일 간에 원조의 고리가 끊겼다는 것은 미일한 안보삼각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기점은 1996년이지만 이런 변화는 그 전부터 진행되었다. 즉, 196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원조가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정도에 최고조에 달했던 미일한 안보삼각관계는 199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의 진전은 그 점에서 한미, 미일 두 동맹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백지운:

오전 세션의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념촬영을 하고 15분 휴식 뒤에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

김병로:

오늘 오전세션에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다. 셴즈화 선생께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관계에 달려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중수교가 중국외교에서 전략적인 '신의 한 수' 였다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다. 중국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딪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을 붙잡은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씀을 듣다보니 그럼 한국도 당시 중국을 잡은 것이 '신의 한 수' 였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다.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를 통해 동북아 평화가 진전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오전에는 안보나 핵문제, 주한미군철수 등 군사적인 문제와 문화교류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경제 부분은 부족했는데 냉전체제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다루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 이제 양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해 주시길 바란다. 특정 패널을 꼭 지명하지 않더라도 논의가 심화되어야 할 부분, 특히 역사적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신옥희:

내가 그동안 참석해 본 다른 한중포럼들이 현실 문제, 정책적 과제에 집중했던 데 비해 오늘 발표는 과거, 역사, 문화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좋았다.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하고 싶다. 셴즈화 선생께서 과거의 한중관계, 한중수교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면, 새로운 신형 한중관계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

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리샤오지에, 자오칭지에 선생의 발표도, 제가 최근 문화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라 흥미로웠다. 한중간에 제한되지 않고 한중일을 아우르는 문화교류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요즘 한중일 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한중이나 한일 포럼이 양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관계를 넘어 한중일 포럼을 하면 좋겠다. 문화교류에서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공유하는 매개 수단이 한자인데, 한국에서는 점점 더 한자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자를 익혀 한중일 간의 학문적 교류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량즈 선생님과 천보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다. 량즈 선생님은 1970년대 남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내가 이 시기를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 말 김일성 주석과 대화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였다. 분명한 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하게 위협 인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면도 있다. 그래서 나는 데탕트 시기 박정희가 느꼈던 위협인식과 탈 냉전 시기 김일성이 느꼈던 위협인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왔다.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런 비교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보 선생님께 질문한다. 이승만이 전술핵 배치를 활용해 대북에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이중의 억제(double containment)문제라고 부른다. 미국이 전술핵을 통해 김일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승만을 억제하는, 그래서 전술핵은 사실 이승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측면도 있었다고 나는 본다.

마지막으로 동지에 선생의 발표는 나의 오랜 관심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고 소련과 국가정상화를 할 때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말 그대로 교차승인 이루어졌다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시기를 공부하는 한국학자들 사이에는 왜 당시 교차승인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미국의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고, 한국이 그것을 유보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동지에 선생님은 교차승인이 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동지에:

왜 교차승인이 실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나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최근 남북한의 유엔 동

시가입에 관한 논문 한편을 냈는데 교차승인에 관한 부분도 다뤘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해서 많이 다루지는 못했다. 더 많은 문서를 볼 수 있기 전에 기존 자료와 나의 개인적 생각을 토대로 답변 드린다. 교차승인이 실현되지 못한 데는 미국과 일본의 장애 요인이 매우 컸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접촉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 북한 접촉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했을 뿐 실제로 교차승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왜 중국이 한중수교 과정에서 교차승인에 관한 입장을 접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중국의 문서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당시의 중국 국내 상황과 다소 연관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한중수교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당시 어려운 국내 상황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정체국면에 빠져 있었고 국가경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한중수교를 난관을 타개하는 계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양국 수교 과정에서 한국이 신속히 대만과의 관계를 끊었는데 그래서 중국도 교차승인에 대한 입장을 접었던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천보:

신 교수께서 매우 중요한 코멘트는 하셨다. 미국의 한국 핵배치는 북한을 겨냥하면서도 남한 정부를 구속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동일하다. 작년 우리 졸업생 중 ‘에버레디 플랜(Plan Everready)’ 으로 논문을 쓴 학생이 있었다. 한국 정국이 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지도자 교체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취지였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중억제(Double Containment)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태균 교수께 질문하고 싶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 한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동지에:

중국이 교차승인을 견지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그때 소련이 이미 한국, 일본과 수교했고 또한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교차승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했다. 소련문제도 중요한 요소였다.

량즈:

신교수의 코멘트가 흥미롭다. 1970년대 초 박정희는 북한과의 빠른 관계 개선을 원치 않았다.

정치와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그랬다. 그에겐 두 가지 걱정이 있었다. 하나는 긴장 완화가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할 가능성, 또 하나는 국내 통치 정당성의 약화였다. 그래서 북한과의 제한적인 관계개선을 바랐다. 일정한 안정을 유지하면서 군사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자주국방 노선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빠른 관계개선을 원했는데, 그 이유는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주한미군 철수에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남북한이 생각하는 관계 개선의 순서도 서로 엇갈렸다. 북한에서는 정치와 군사 분야의 완화를 실현하고 나서 경제, 문화,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남한에서는 정반대로 우선 인권 문제를 해결한 다음 경제 문화 문제,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상숙:

선즈화 교수님의 한중관계에 대한 발표는 저도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다. 국립외교원에서 한중수교에 참여하셨던 한국측 외교관 다섯 분의 구술을 채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최근 김아중 대사의 구술을 담은 책이 나왔다. 1990년 이후 왜 중국이 한중수교에 적극적이었는가에 대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는 선즈화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시의 한국의 외교관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리샤오지에 선생에게 질문 드린다. 당과 신라의 교류가 굉장히 풍부했고, 학술적으로도 많이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현실에 어떤 교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면에서 보면 나당 문화교류가 활발했었던 근간에는 나당 간의 긴밀한 정치군사적 관계가 바탕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문화교류가 확대된 데에는 정치군사적 협력관계가 발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한중관계의 현실적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군사적 관계가 우선화되어야 문화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리샤오지에 선생의 의견이 듣고 싶다.

또 하나는 당시 당나라가 외국 문화에 매우 개방적인 나라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한중수교 때처럼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외국 국가들에게 개방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류밍:

김성철 교수가 말한 위계질서에 대해 동의한다. 미일관계가 한미관계보다 우위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미국은 일본이 세계 대국이고 한국보다 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냉전대결 구도에서 일본이 직면한 위협이 좀더 장기적이라면, 한국이 직면한 위협은 더 직접적이다. 일본 패전 후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안보를 총책임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 정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고 미국은 한국군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전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문제다. 이 문제는 닉슨, 카터 정부 시기에 걸친 문제였고 미국 국내경제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닉슨 시기 군축에 관한 문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닉슨은 세계 차원에서 닉슨주의를 표방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을 정말로 펼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카터 시기에 들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카터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으로서 인권외교를 내세웠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한국측의 요구로 인해 철수가 실현되지 못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깰 수도 있어 카터 행정부도 결국 결정을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 두 시기를 비교연구하려면 더 많은 문서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냉전의 큰 배경 하에서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 각각의 특성과 그들의 공통된 외교노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교차승인에 관해 나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다. 우선, 한중수교는 덩샤오핑이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었지만 그 전부터 준비작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 노태우 대통령이 고문을 보냈는데 그가 베이징에 꽤 오래 머물며 사전준비 작업을 많이 했다. 예전에 중심연구소라는 아주 유명한 민간 싱크탱크가 있었다. 거기서 소위 명문 혁명 2세(紅二代)들이 한국을 방문한 다음 덩샤오핑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덩이 그 보고를 보고 한중수교를 서두르라는 지시를 했다. 특히 천안문 사태 후 중국이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또 외국의 기술과 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고위층의 인식이 있었던 차라, 수교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외교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있었다.

미국은 교차승인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는 키신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미접촉 과정에서 김일성의 최측근 중 한 명이 교차승인을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교차승인이란 1980년대에 나온 개념으로 매우 미숙한 것이다. 사실 북한은 두 개의 한국

정책(two Koreas)을 반대했고 유엔 가입도 거부했다. 그들이 볼 때 교차승인은 한반도의 분단을 영속화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늘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지금 김정은도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것 같다.

선조화:

주한미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해하기 힘든 문제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 주둔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미군 철수에 대해 불안해 하기도 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 사람마다 다른 것인가? 정당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처음에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입장, 즉 단호한 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럼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났을까? 1971년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대화기록을 보면, 미군 철수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대화 과정에서 키신저가 미군철수는 시간문제라고 언급한다. 당시 닉슨은 베트남에서 군대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고 장차 한반도에서도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키신저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되면 권력의 공백이 생겨 일본인들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저우가 마오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알 수 없지만, 후속 회담에서 저우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의 기한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그 후에 기한에 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덩샤오핑 시대에 들어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 변화는 더 컸다. 전에는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라고 내세웠던 데에 비해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군대 철수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쪽으로 식으로 태도가 누그러졌다. 덩은 내부 담화에서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이유가 한반도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키신저는 미국은 남한을 잘 통제해서 북진을 막하고 중국은 북한을 잘 관리해서 남침을 막아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미중관계도 북중관계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내 판단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 북중동맹이 이미 와해되었다.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 정부의 생각도 달라졌을 것이다.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이 어떤 목적에서 주둔하는가.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주한미군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박태균:

류밍선생님, 선즈화 선생님, 천보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와 질문을 해 주셨다. 저도 선생님들 의견에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미동맹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천보 선생은 한반도에 반미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고, 선즈화 선생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큰 정세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대해 한국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다. 관련하여 키신저와 주은래의 대화록 부분은 흥미롭고 중요하다.

한미관계에 대한 책을 쓰면서 내 책의 제목을 ‘우방과 제국’ 이라 제목 붙였다. 물론 출판사가 책 많이 팔리라고 붙인 제목이지만. 내가 볼 때, 한국이 바라보는 미국은 한편으로는 동맹으로서의 우방이지만, 힘의 불균형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에 개입하는 제국이라는 이중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그런 양면적 인식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길게 보면, 19세기 말부터라고도 생각한다.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로 ‘미스터 션샤인’ 이 있다. 거기서의 미국도 우방이자 제국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저는 신유희 선생님께서 이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한국에는 어떤 위협의식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불균형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위에 한국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하다. 그 위협이란 한편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인식도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미국의 방기라는 위협이다.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미국의 행정부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 한국이 미국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방기의 위협 인식이 한국사회 한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처음에는 주로 군사안보적인 측면이었는데, 이후로 가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편,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 모른다는 위협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실은 한일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요즘 저는 한일관계를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방기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에 의해 방기되는 상황까지 보인다. 서로 상대를 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도대체 한일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가 나타날까.. 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65

년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날까. 한국과 일본은 수교도 맺었고, 미국과 동맹이지만, 한일관계는 항상 긴장의 관계다. 그리고 이 긴장관계에서 한국도 일본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을 바라본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 그 점에서 양국의 미국과의 관계는 단순히 북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그러면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전쟁 때부터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느냐를 평가할 때 북한의 전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플러스 중국 전력을 보기 때문이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중국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주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53년 정전협정 맺을 때, 미국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내놓았다. 한반도를 중립화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쓰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8년까지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했다.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중립화 단계에 대한 논의는 1953년 국가안보회의 문서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폐기된다. 선즈화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성격은 분명히 변했다. 2005년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이후 지금의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혹은 남북불가침조약으로 바뀐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분명 또다시 중요한 논쟁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까 북중동맹의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북중관계와 한미관계는 다르다. 양자가 같은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협정 등이 체결될 때는 분명 주한미군 의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사실 한국사회나 언론의 여러 비판이 있을까 봐 한국도 미국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다.

류밍, 선즈화, 동지에 선생께 북중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다.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나 중국의 입장에서나 신의 한수였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잃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었을 것이다. 제가 2003년, 2005년에 북한에서 그쪽 학자들을 만났을 때, 중국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그 근원이 1992년 한중수교부터 고난의 행군시기의 북중관계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중수교는 북중관계에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 한중수교는 동북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

신욱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션즈화 선생님이 제기한 두 가지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의사가 실제로 그랬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때는 주한미군이 실제로 나갔다. 상당 수의 주한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갔고 DMZ를 방어하던 주한 미군들은 다 후방으로 물러섰다. 굉장히 큰 전략적 전술적 변화였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와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는 키신저가 주도한 미중관계의 변화라는 전략적 환경 변화에 기인했고, 카터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내정치나 인권문제에 대한 카터 자신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었기에 두 문제는 굉장히 달랐다. 션즈화 선생 말씀대로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대화에도, 조건이 성숙되면 주한미군은 전면 철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만약 한국이 당시 그것을 들었다면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키신저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떼더라.

션즈화 선생님이 제기한 두 질문, 즉 한국사람들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정말 둘 다 중요한 문제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이 한국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본다. 다만 핵 보유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치적 협상에서 핵의 존재는 부담이 되며, 정치적 수단 차원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박태균 선생 말씀 그대로다.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다. 나는 이를 ‘이중의 무정부 상태(Dual Anarchy)’ 라고 말한다. 남북한 관계, 분단체제가 야기하는 아나키 상태와 더불어, 동아시아에 EU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제도화된 지역화 협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아나키가 있다. 국방부는 이를 현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구분한다. 아직까지는 두 가지 위협에 모두 주한미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억지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남북한이 평화협력으로 가서 한반도의 무정부 상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통일 혹은 통합된 한반도는 무정부 상태인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자(balancer)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수교 당시 일본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당시 미국은 주일, 주한미군은 일종의 병마개다. 병 속의 가스가 분출하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중국에게 말했다.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가 충분히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선즈화:

박태균 교수와 신욱희 교수의 답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 특히 북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답변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나 국민들은 여전히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군사지원을 할 거라고 믿는가? 물론 중국이 이에 관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의 지식인이나 일반 국민들 중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다. 중국 네티즌의 토론을 보면,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큰 배신감을 지니고 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는 과거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 본다. 유사시 북한을 돕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거스르는 어리석은 결정일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북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걱정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미군을 잡아둔 것이 위협의식 때문이라면 위협이 해소되더라도 미군을 남겨두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둘째, 중국을 북한의 배후로 지목한다면 평화협정 협상 때 왜 중국을 참여시키지 않았나? 중국을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안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중수교의 결과로 북중관계가 변화한 것에 대해 당시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고민 중이다. 내 책을 쓸 때 이 질문에 답하고 싶었는데 참고할 만한 문서가 없었다. 덩샤오핑은 한국과 수교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교를 단행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북한이 핵무장의 길로 나서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핵문제의 대두야말로 1990년대 후반 한반도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병로:

선즈화 선생께서 질문하신 바, 평화협정에 중국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과거 10.4선언 때나 그 전에도 보면 주로 북한 측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는 우선 중국은 미국, 북한, 한국과 관계가 다 개선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간, 북미간에 문제가 시급하니 남북중 당사자들이 따로 논의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선즈화 선생님께서는 중미관계가 변하면서 북중관계도 예전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최근 북중관계가 과

거의 동맹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요청하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북중간의 관계가 긴밀히 강화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을 경계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중국을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북한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는 역시 72% 정도가 중국이라고 답한다. 한국은 76%가 미국이라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남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에 대해 친밀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왜 중국 배제론(차이나 패싱)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남, 북, 중국이 함께 논의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박태균: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잘 꺼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검열이랄까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때 정치적 공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할 때 인터넷, SNS상에서 공격을 받는다. 한국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오히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양키 고홈’이라는 구호가 있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1980년대보다도 지금 분위기가 더 경직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김병로:

덧붙이면 모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76%의 국민들이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과거 10년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된다.

박태균: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주한미군 철수의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 누구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 쪽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미국의 군 관계자들도 평화협정이 맺어지든 종전선언이 선포되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다는 말을 하고 신문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 관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일부 관료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먼저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상황은 아닌 것 듯하다.

북중관계에 대해, 얼마 전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북한을 실질적인 중립국으로 본다고 말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실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종속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지난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직전 북한의 최선희와 김계관이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직후에 나왔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오더니 뭔가 중국과 모의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북한 내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평화회담,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갑자기 젊은 지도자가 나와 핵무기 없애자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런 입장에서 나는 최선희와 김계관의 발언은 북한 내부용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중립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사회가 북한을 보는 인식 수준이며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정부 간 관계가 도대체 어떤 수준의 동맹이나 우호 관계인가 하는 것이다.. 그게 문서로 나온 것도 없고 대화록으로 공개된 것도 없는 상황인 듯하다.

리샤오지에:

당과 신라의 관계는 일련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당 초기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당이 신라와 손잡는 것을 택했으니 이때 양자는 협력 관계였다. 백제 멸망 후 당과 신라가 백제 땅을 쟁탈하기 위해 충돌을 일으켰고 충돌이 가라앉은 다음 당이 백제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양국은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를 형성했다. 바로 이 시기에 당과 신라는 문화교류를 매우 활발하게 추진했다. 이상숙 선생은 문화교류의 전제가 정치군사적 관계의 완화라고 말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군사 관계의 긴장 완화와 이에 따른 문화교류는 상대를 더 잘 알고자 하는 유인이 된다.

이상숙 선생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하면, 당과 신라의 문화교류는 양자관계를 뛰어넘어 다자적인 것이었다. 즉 당과 신라 사이에는 일본과 서역을 포함하여 폭넓은 범위 안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과 신라의 관계는 다자적이면서도 상호촉진의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가 현재의 한중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병로:

2세션의 발표자 토론자에게 감사한다. 한중관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풀어왔다고 생각한다. 오전세션에서는 1970년대와 1990년 초반의 한중수교의 역사적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대해 주로 토론했다. 오후에는 한국 패널에서 중국 측에 질문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셴즈화 선생께서 북중간 최근에 드러나는 것이 알고 있는 전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학자와 민간의 사이를 오가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오전세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작년 8월 셴즈화 선생님 오셔서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대화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감명 깊게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세션을 기대하면서, 오전세션을 마무리하겠다.

제3라운드.

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의 전망

천보: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다. 먼저 상하이사회과학원의 류밍 교수께 발표를 부탁한다..

류밍:

준비한 분량이 많아 주어진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겠다. 나의 발표 주제는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의 중미, 한중, 한미관계이다.

우선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첫째, 중국은 지금의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북미 양측이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으므로 양쪽이 동시에 양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도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한번에 다 써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요긴하게 쓸 것이다. 때로는 협상과정에서 온갖 장애요인을 만들어 시간을 끌기도 한다. 북한은 미국 앞에서는 약자이지만 손에 쥐고 있는 비핵화 카드를 잘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오전에 우리는 역사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1980~90년대에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미관계가 지금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체로는 나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핵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되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북한의 군사적 지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가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이다. 이로 인해 북중 경제교류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은 1980-90년대와 다르다. 당시에 한미로부터 군사적 압박이 있었다면 지금은 국제사회로의 경제압박이 있다..

셋째, 미중관계에 관해. 지금 미중 간 갈등은 무역갈등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전략적 경쟁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경제, 무역, 과학, 학술교류 등의 광범위한 봉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가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년 무역전쟁 전 미중 정상은 빈번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대북제재에서도 공조를 했다. 그러나 지금 미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다소 배제되었다. 중국도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처리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장담했으나 내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다. 2016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큰 진전을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핵화 과정에서 핵시설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북한이 이라크나 리비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한 검증을 못할 것이다. 미국 혼자 힘으로는 비핵화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관건일 것이다. 최근 북중러 삼국이 모스크바에서 삼자 외교부 부장 회담을 가지고 북핵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제재에 관해 러시아는 제재를 풀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겠지만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대중 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북한이 중국의 카드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영향에 미친다는 것이다. 향후 평화체제 구축에서도 중국의 참여가 없으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가 실현되기 어렵다. 북미가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북한이 완전히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례가 많았다. 더구나 북한은 체제 특성상 완전한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농업과 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개방이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북한은 1인체제로 핵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모진이 북핵 문제에 관한 행동에 따르는 위험요소들을 인지시켜 줄 것이다. 김씨 가문이 통치를 유지하려면 온갖 위험요소를 고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전략적 계산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리비아의 교훈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결코 순순히 따르기만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대응보다는 유연한 대처로 미국을 상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제한적이라 생각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측이 북측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받아냈지만 미국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먼저 양보해 주길 바라지만 미국이 융통성 있게 응하기는 어렵다. 북한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의견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자로서 한국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전망이다.

이상숙:

한국 참가자 측이 모두 서울대 소속인데, 외부인인 저를 좋은 회의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정치, 조중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다. 김정은 시대 당군관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겠다. 최근 김정은이 많이 변했다는 말이 한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회담 전인 4월 21일에 김정은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핵무력 건설과 경제를 동시에 하겠다는 기존의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전략 노선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김정은 시기는 선군 정치, 선군 전략, 선군 노선으로 대표되는 시기였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선포가 북한의 국내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군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선군정치를 생각해야 한다. 김정일 시기에는 국방위원회가 국가 최고지도기관이었고, 김정은 시대는 국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변화를 우리가 당군관계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 참석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당군관계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도 덩샤오핑과 마오쩌둥 시대의 당군관계가 같지 않았다. 데일 허스프링(Dale Herspring)이라는 학자도 당군관계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지도자의 변화,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엘리스 요페(Ellis Joffe)는 중국의 당군관계의 세 가지 특징을 들었



다. 첫째 당의 통제, 둘째 공생관계, 셋째 직업주의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면서 특정 시기에 특정 성격이 강해지거나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김정은 시기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입해서 설명해 보겠다.

북한의 문헌은 선군정치를 국가기구 자체

를 군사체제화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는 정치체제라고 설명한다. 김정일 시대는 원래 전시의 임시적인 기구였던 국방위원회를 모는 국가기구를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을 시키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기구로 만들었다. 이는 이 시기가 김정일이 생각하기에 북한의 위기의 시기였고, 그래서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에 필요한 국방위원회를 국가 지도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요페의 말을 빌리자면 이 시기는 당군의 공생 관계의 성격이 강했던 듯하다. 아시다시피 김정일 시기인 1990년대 중반은 체제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경제난도 있었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김정은 시기에는 당군관계가 어떻게 변했을까. 당군 관계에서 김정은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당 조직의 정상화이다. 대표적인 예가 7차 당대회이다. 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26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 시기의 26년이 당군관계에서 비정상적이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당의 정상화를 피하려고 보니까 이전의 국방위원회 시스템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은 시기 초기에는 국방위원회 시스템을 유지했지만 2016년 사회주의 헌법에 의거하여 국무위원회를 선택하게 된다. 당시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보면 당의 최고대표 한 명, 내각 최고대표 한 명, 군의 최고대표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군-정이 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당의 정상화를 통해서 당-군 관계를 변화하려고 보니 국방위원회 시스템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낸 것이 국무위원회 시스템이다. 본인 역시 국무위원장이라는 공식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한다.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의 임무에는 ‘선군협력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중요정책을 세운다’ 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국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에는 ‘선군’이라는 말이 없어진다. 대신 ‘국방건설을 비롯한 국가 중요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무위원회가 선군협력노선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회가 선군정치를 구현한 국방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국무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김정일 시대에 군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건설에서도 군이 중시되었고 군은 여러 이권, 특히 무역에 관한 이권도 가졌다. 그런 군이 비대해지는 것을 김정은으로서는 견제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본인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적 이유에서도. 그래서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킴과 동시에 국무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어, 이전의 당-군 공생관계보다는 당의 통제, 당을 통해 군을 강하게 하는 당군관계의 성격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18년 4월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서도 경제건설에 당과 국가

가 총력을 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김정일 시기에는 경제건설에서 군이 가장 먼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김정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의 출범은 군 중심에서 벗어나 당-군의 조화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무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김병로:

프로그램에 적힌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모델은 존재하는가’ 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이제까지 논의한 안보나 비핵화 문제는 북한 안에서 보면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보겠다. 북한은 1964년부터 경제와 국방문제를 별개로 보기보다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전략을 유지해왔다. 2013년 핵개발을 중심으로 한 병진노선이란 지난40-50년간 북한의 병진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 점에서 북한문제에서 안보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본다. 2018년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배경과 요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유엔과 미국의 제재, 압박 정치의 효과로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해석, 둘째, 북한 내부적 관점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에 나섰다는 해석. 셋째,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의 성과라는 해석, 넷째, 중국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중국역할론이다. 나는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나는 북한 내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이런 변화의 계기가 2016년 5월 7차 당대회라고 생각한다. 7차 당대회를 26년만에 열게 된 주된 동기도 바로 경제문제이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 북한은 경제적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7차당대회를 개최했다. 7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특별 경제전략을 통해 2021년 이후 장기적 경제전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달 후에 이러한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비핵화 5대원칙’을 정부 대외부 성명으로 발표하게 된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비핵화 5대원칙’에 핵 포기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와 있고 미군철수를 조건으로 걸고 있다.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는 있는 것이다. 10년전까지 북한의 경제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2002

년 이후에 시장486개가 등장한다. 전 지역이 시장에 의해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국가계획경제의 비율을 보면 시장이 7, 국가계획이 3, 혹은 6:4로, 시장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시장을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전문적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의 10% 정도다. 대략 100만명에서 120만명 정도의 전문 상인 인구가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류층과의 계층갈등 같은 것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경제특구들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외관계와 환경이 중요하다. 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최소한 완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려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기본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내 판단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그에 따른 미군의 역할 조정 및 철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한반도 전략이 아직 수립이 된 것 같지 않다. 결심이 그래서 현상유지로 가려고 하니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대외관계 면에서 보면 제재 해제가 낙관적이지 않기도 하고, 설령 경제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그것이 북한의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겠냐는 생각이 지금 북한 내부의 조건을 보건대 전망이 밝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체제로 바뀌려면 많은 요소들이 변해야 하는데, 아직도 북한은 경제논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다수 간부들과 국민들은 안보논리에 지배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건설을 하기엔 많은 이념적 장애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법이나 정치 기구들을 많이 갖춰놓고는 있다. 법제도는 상당 부분 거의 완벽할 정도로 발전했고 시장경제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각책임제나 기업 책임관리 등 제도적 변화들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북한이 지역자력갱생체제라는 형태로 지역별로 단절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 전국적인 통합시장으로 가기 위한 효율적인 교환시스템을 마련하는 정책이 현재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변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시장계획플랜은 주로 캐나다에서 교육받은 40여 명과 관련된 몇 사람들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처럼 전문인력 양성 면에서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완화되더라도 약간의 경제성장은 가능하겠지만, 도약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현재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만, 과연 이 관문을 넘어선 다음 경제발전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제도, 전문, 대외환경들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 점에서 아직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제4라운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반도의 역할

신욱희:

내 글은 이미 써둔 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제목은 ‘부상하는 중국과 샌프란시스코체제’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오전에 김성철 교수가 잘 말씀하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말을 했다. 손인주 교수가 G2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세계가 G2 두 강대국에 의해 제패되고 있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듯하다. 오히려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G0, 즉 강대국이 없는 무주공산의 혼란스러운 세계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구적인 수준이 아니라 지역적인 수준에서 국제정치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좀 더 적합하고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 요인이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자(agent)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연구의 내용은 우선 내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지칭했던 기존 냉전기에 형성된 안보체제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런 전환의 연장에서 행위자로서 한국에게 주어진 정책적인 범주,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그리고 발표문 뒷부분에 부상하는 중국, 샌프란시스코체제, 미국의 역할 대 중국의 부상이라고 쓴 것은 각각이 하나의 문단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느냐라는 대한 질문에 대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속도가 좀 조절되고 있다. 그러면 부상하는 중국이 위협적인 것이냐라는 또 다른 질문, 소위 중국위협(China Threat)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금 상식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상하는 중국이 가져오는 지정학적 측면과 지경학적 측면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던 여러 부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체제적인 측면에서의 지경학, 즉, 새로운 관점에서의 신지정학적 지경학이다. 즉, 지리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여 협력의 기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선생님들께 질문도 드리겠지만, 그 점에서 일대일로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일대일로는 기본적으로 서진전략, 서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3성,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에 따른 접경 협력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에게 지경학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관해. 이 부분은 좀 긴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는 오전에 김성철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계적인 체제라는 점, 둘째는 샌프란시스코체제로 만들어진 전후 처리는 분명 불충분한 것이었고 따라서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세번째는 샌프란시스코체제가 단순한 안보체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 관념이 연결된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안보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이것이 폐기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조금은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관념적 측면에서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샌프란시스코체제에 안주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냉전이 끝났을 때 그랬고, 지금 진행되는 중국의 부상이 그렇고, 또 최근 새롭게 진행되는 남북관계가 그렇다. 문제는 여전히 한국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미국의 역할과 부상하는 중국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략적인 고민이 된다는 것은 모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런 상충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사드 배치 이후 조금은 불편했던 한중관계라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어떻게 변환시켜야 하는가가 이제부터의 나의 발표 내용이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러한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전환이라는 것은 한중협력의 확대와 동북아 지역주의의 모색이라는 두 개의 전제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는 우리에게 다 중요하며, 거기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대응이 같을 수는 없다. 샌프란시스코체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강화해야 한다고 보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샌프란시스코체제, 즉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상대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 4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첫째, 내부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완화하여 한국이 좀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국가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역량 확대를 통해 내부적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미자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동안 한국이 부분적으로 모색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다. 가장 큰 부분은 전시작전권의 문제이다. 앞의 두 정부가 이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이었지만 현정부는 전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전시작전권 이양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조금하게 대미자율성을 추구할 경우 불필요한, 또는 의도치 않는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미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일협력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한미일 관계와 더불어 한중일 관계의 확대, 협력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중일관계도 갈등관계에 있다가 최근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베 총리가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반면 한일관계는 여전히 조금은 불편한 상태다. 이는 상당 부분 국내정치와 역사문제에 기인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능적인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중협력, 한일협력은 같이 가야 한다. 넷째, 대북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북한이 '병진'에서 '선경'으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전히 김정은은 병진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병진에 대해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핵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되, 경제 교류의 확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

상 딜레마가 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또는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제재와 한국, 중국, 러시아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협력의 경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일단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으니 이를 지속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송실대의 이정철 교수는 비핵화를 빼고 거기에 신뢰구축과 군축이라는 말을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감한다. 오전에 말한 ‘이중의 무정부상태(dual anarchy)’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 구축과 군축을 해결하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비핵화라는 말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버려서 이 말을 빼고 과연 논의가 얼마나 가능할지 약간 우려가 된다.

손인주:

작년에 서울대에 온 이후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한국측 참여자로 참석한다. 홍콩대에 10년 있으면서 중국 교수들과 중국 팀에 앉았고 미국에서는 미국교수들과 미국팀에 앉았다. 지금 이 자리에 한국팀에 앉으니 좀 생소한 느낌이다. 제목을 다소 자극적으로 ‘G2 신화, 신냉전 신화’로 뽑았다. 그 이유는 작년에 한국 오자마자 약간 놀랍기도 하고 의아했던 것은 한국에서 G2라는 말을 여전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G2라는 말이 10년 전에 나온 뒤로, 지금은 미국에서도 거의 쓰지 않고 다른 데서도 잘 쓰지 않는 데, 작년까지도 한국에서는 미디어와 학계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였다. 제 생각에는 한국은 또 신냉전이라는 말을 10년 정도 쓰지 않을까 한다. 그 말의 뜻에 대한 논쟁을 깊게 하지 않으면서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신화’라는 다소 어감이 강한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강국이고 전세계에서 미중관계가 제일 중요한 양자관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미중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분석의 틀, 이론의 틀로 삼다 보면 21세기의 다른 중요한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를 놓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선택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21세기 분권적, 다원적, 국제질서의 등장 그리고 중견국의 역할을 간과하기 쉽다.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G2’, 대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신냉전’ 모두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어,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G2’라는 10년에 나왔지만 중국도 받아

들이지 않고 미국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커지면서 G2가 희망사항에 불과했음을 더 알게 됐다. 그러나 G2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는 아직도 거론되고 있다. 올 초부터 변화가 생겨, ‘신냉전’이라는 담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의 미소관계, 즉 양극 글로벌 냉전체제와 앞으로 벌어질 미중 대립관계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중 간 대립, 전략적 경쟁을 넘어 글로벌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구조적으로 양극화되려면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다. 다른 요소도 많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만 언급하겠다.

첫째, 미중의 주요국가들을 양극 중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양극세력분포(strong bipolar power)가 있어야 한다. 가령 EU가 미국이나 중국이냐라는 선택을 하겠는가. 아프리카 국가들도 양자택일할 국가가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도 많은 나라들은 그런 선택을 바라지 않으며, 인도나 호주는 자기들끼리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시기와 같은 강력한 양극세력분포가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미중 동맹국이 서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나타나야 한다. 냉전시기는 양 동맹국이 거의 분리되었는데, 지금 글로벌화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멤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구촌이 완전히 양극화되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중국과 미국이 군사안보 정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에서 제로섬, 서로 이해상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 환경이나 금융, 의료, 보건에서는 양국이 협력하는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로섬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신냉전 담론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미중 대립은 현실이고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명 분권적이고 다원적인 국제질서의 추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중국도 어떤 보편적인 가치,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다.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에 대해 논하지 않고 대신 자국의 이익이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입장을 취해 종래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거기에 더해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시진핑 주석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한 반글로벌주의의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반글로벌주의’가 미중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영토주권을 중요시하는 정권이 유럽, 중남미 등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한 혹은 동아시아 지역의 거버넌스 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아까 신욱희 선생님 말씀대로 아나키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나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중상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분열되고 헤게모니 리더십 부재와 혼란 속에 자기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싸우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좀더 낙관적으로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양자협력체나 미니 다자주의 협력체가 공존하여 이슈에 따른 선택적 협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이념에 근거한 일률적(one side for all) 협력체보다는 각 지역 및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른 유연하고 다원화된 협력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이러한 분권적, 다원적 협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대국뿐 아니라 중견국들의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는 유사한 패턴이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21세기는 경제구조도 달라지고 과학기술발전 체제도 달라지고 국제규범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좀더 창의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백지윤:

제 바뀐 발표제목에 ‘동양평화’ 라는 말을 썼는데, 한국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중근의 글에서 딴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하겠다. 올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남북관계는 호전의 계기들이 수 차례 있었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당시에는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이 남과 북, 혹은 남-북-미 사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외교가 진행되고 있고 동북아의 문제로 한반도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맞고 있다. 그러면 동북아는 이런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할 때 비관적인

면이 많다. 동서독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고르바초프와 헬무트 콜을 중심으로 서독과 소련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미, 소, 영, 프 주변 4대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기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었다. 또한 동서독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유럽공동체, 나아가 유럽연합(EU)에 대한 필요를 구성원들이 서로 인정하고 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말하자면, 동서독의 문제가 유럽의 문제로서 인지되고 협력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남북미는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상호 신뢰를 통해 동북아의 공동의 평화와 안보 기제를 만들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고 할 때 긍정적이진 않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13년째 조사를 해온 자료 중 몇 개를 추려왔다. 첨부하는 자료를 보시면, 2018년의 조사인데 2007년부터 10년간의 추이를 볼 수 있다. 아까 중국 패널에서 한국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미국에 대한 호감이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한동안 핵문제로 인해 떨어졌다 최근에 급상승했다. 주의해서 볼 부분이, 중국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사드문제 이후 급강하한 것을 볼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히 2016년 이후 특히 중국을 지목하는 수가 급상승한 데 반해 북한을 지목한 수는 굉장히 낮아졌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고, 특히 2007년 이명박 정부 이후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 높아졌다. 중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원래는 협력관계, 경쟁관계,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뒤섞여 있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경계의 대상으로 비율이 확 높아졌다. 다음, 한반도의 평화를 어느 나라가 가장 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순으로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굴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으로 보는 쪽이 훨씬 많았지만, 미중 사이에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중국 선생님들은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지금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은 일반 대중이나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부정적임을 느낀다. 이것은 한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난 10년 북핵문제가 안 좋았을 때 중국은 이를 북미가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켜왔다. 둘째, 사드보복, 경제보복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대화했다. 이를 만회하는 데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 25년간 발전시켜온 한중관계에 결정적인 큰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희망적인 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관계

가 같이 좋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한중뿐 아니라, 북중, 중일, 중러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신냉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북중러의 북방삼각과 한미일의 남방삼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신냉전은 물론 과거의 냉전도 이런 이원구조는 역사를 단순화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선즈화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냉전시기 사회주의 내부에도 또 다른 냉전이 있었다. 보통 냉전이라고 하면 미소 냉전, 미중 냉전만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중소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냉전 안의 냉전이라고 할까. 글로벌 냉전 안에 아시아 냉전이 함께 있었다. 1950년대 소련이 미국과 데탕트를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고 그것이 중소간의 갈등을 악화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중미 화해 및 수교를 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연미항소(聯美抗蘇)의 일환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그것이 소련을 고립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소련 해체를 낳았다.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긴 하지만, 이처럼 글로벌냉전은 아시아냉전과 뒤얽혀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까지 고립되고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전적으로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내부의 요인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소 갈등 속에서 북한은 우방에 의존하기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냉전시기 사회주의 북방삼각 내부의 균열이 지금의 북한을 만든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전에 논의한 것처럼 남방삼각 내부도 나름의 균열관계가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냉전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현실적인 문제. 4.27 남북정상회담 때.. 다들 도보다리 대화를 TV에서 보셨다.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신경제구상’ 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한반도신경제구상’ 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한 실체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정부에서 만든 홍보물을 살펴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도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하는 구상이었다. 한반도신경제구상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신욱희 선생님이 일대일로에서 동북아만 빠져있는 상황을 지적하셨는데, 2015년 일대일로의 본격적인 청사진이 나왔을 때 중국의 동북지역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대일로와 동북아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상실한 영향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었다. 일대일로의 중몽러 회랑과 한반도를 연

결하는 구상들이 많이 나왔다. 중국에서 2000년대 초반 ‘신동북진흥전략’ 이 나왔다. 개혁개방 이후 줄곧 낙후되어 온 동북3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반도와 연결하여 황해권과 동해권으로 동북지역을 문을 여는 것이다. 2018년 8월엔 랴오닝성에서 ‘일대일로종합시험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아마 한반도 정세변화를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될 것 같다. 작년 12월 한국경제정책연구원과 교통연구원에서 만든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중몽려 회랑과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연결하는 청사진들이 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아마도 동북3성의 지정학적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과 기대가 공존한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대일로 구상에는 주변국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국가간 관계가 좋아지고 지역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간과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동북3성, 북한,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지역이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이다.. 지금의 폐쇄되고 단절된 북중러 접경 지역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평화의 상징을 역사적으로 찾아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원래 동북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남하하는 러시아와 북상하는 일본이 부딪혀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국제적인 충돌지점이 되었다. 1910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 나온 것도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다. 그걸 보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위순항을 한중일이 공동 관리하는 국제항으로 만들고 국제헌법도 만들어 교황의 인준도 받자는 제안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겠지만, 처음으로 초국적 지역협력의 이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대일로의 중몽려 회랑, 중국의 신동북진흥전략, 한국의 신경제구상 등을 연결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 이런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초국적 지역 평화의 이념을 살려내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정훈:

나는 주로 문학과 영화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연구해 왔다. 한중 간 첨예한 이슈에 대해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지만, 오늘은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이 북한 유사시 북한의 영토를 어떻게 점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터넷 상의 논의가 뜨거웠다. 여기서 말하길, 김정은이 일본이 백년의 적이라면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오전에 셴즈화 교수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교

류를 얘기했는데, 나 역시 민간 차원에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는 말에 동감한다. 그러나 학자로서 우리는 민간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눈 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 한국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것이 통하지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수세에 몰려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소위 미국 전문가들에게 묻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나야 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 같은 보도가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번번히 중요한 사안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미국 전문가들이 기성관념에 얽매어 새로운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누리꾼들은 트럼프를 매우 좋아한다. 심지어 국정운영 능력이 명나라 만력제를 방불케 한다고 해서 트력제라는 닉네임까지 지어줬다. 임진왜란 때 만력제가 조선에 군사지원을 보냈던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한반도의 통일에 힘을 써주고 있는 말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반미 감정이 강했던 한국에서 있기 어려운 일 같다. 미국의 대통령이 통일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한 바, 북한 유사시 북한 영토 분할에 관한 네티즌의 소문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한국의 어느 해커들이 캐낸 정보라고 알려져 있다. 즉,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의 영토를 분할할 계획을 한미연합사령부에게 제안했고 사령부가 이를 한국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탈북한 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가 저서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

선즈화:

그럼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자. 질문이 있으면 명패를 세워 주면 순서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그 전에 내가 먼저 몇 가지의 코멘트와 질문을 하겠다. 오후 세션에서 한국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우선, 이상숙 교수에게는 북한 군부의 세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신비스런 국가이고 현지조사나 방문을 할 수 있는 학자가 극소수다. 나는 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제한이 많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고층빌딩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서쪽만 찍으라 하고 동쪽은 절대 못 찍게 하거나 어디 가나 요원이 따라 붙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한국은 많은 탈북자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 북한의 내부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중국에서 말하기를 김정은이 10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비서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대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어디서 얻었는지 의아해 하는데 이는 다 그의 비서진 덕분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가? 특히 그와 군부와 관계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그와 군의 관계가 북한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김병로 교수가 북한의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모두 북한을 도와주고 시장경제의 길로 인도하는 동시에 경제원조까지 제공해도 북한의 경제가 단기간에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란 말 같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의 여론이나

지성계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이다. 문정부의 방안은 통일의 경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 측이 북측의 통일방안을 존중하거나 따를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지금 남북은 정치제도가 완전히 다른데, 훗날 북한의 의지대로 통일이 되면 미래의 통일 한반도가 어떠한 정치제도가 될까. 이에 관한 한국학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

신욱희 교수는 중국의 부상이 일종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물론 많은 중국의 주변국들이 유사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나는 몽골, 미얀마, 네팔 같은 나라를 다녀보니 그들도 중국의 세력확장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한국의 심정을 이해한다. 나는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국이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면 한국이 위협을 느낄 것인가? 1990년대 중국과 한국의 경제는 상보적이라고들 했다. 그것이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동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왜 한국에 위협이 되는가? 정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이것은 신 교수한테 한 질문이다.

손인주 교수의 신냉전, 반세계화에 대한 견해도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손 교수가 강조한 동맹관계, 즉 냉전의 양대 진영동맹 간의 대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늘날의 중국과 당시 소련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당시 미소 양국이 왜 2년 사이에 협력관계에서 대결관계로 변했을까? 중요한 이유는 미소 양국이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유엔 외에 다른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마셜플랜이 공포된 이후 미소는 대립각을 세웠다.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 있으니 갈등과 대결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같은 체제 안에 있어 갈라놓기가 매우 어렵다. 비유하자면, 당시 소련은 미국과 연애하다 좋다 말아 헤어진 것이라면 지금 중국과 미국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서 갈라서기가 쉽다. 그래서 신냉전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마찰과 의견차, 갈등이 존재하고 심지어 국부적인 충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냉전의 구도로 변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때까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끊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우니 냉전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오기 전 미국에서 보름 정도 머무르며, 네 개의 도시, 십여 명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가졌다. 지금 미국 정치계가 중국 억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다들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미중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세계화 과정 속에서 모두의 이익이 서로 뒤엉키게 되어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

백교수가 제기한 문제에도 공감한다. 중국의 이미지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에서도 악화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전에는 친중파가 꽤 있었는데 지금 짝소리를 못하

고 있으며 내심 불만도 많다. 이는 중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찬양밖에 안 듣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어느 정도로 유익한 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중국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정신 차리고 나면 뭐해야 할까? 미국 학자한테 물었던 질문을 한국학자한테 똑같이 물어보고 싶다. 한국은 중국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회의 시작하면서 나는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정부의 의견도 중국 외교부의 의견도 아니며, 오로지 일부 학자들만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이런 말을 했다가 매국노라고 욕먹었다. 하지만 나는 한반도 역사를 8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백교수가 방금 말한 그런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는 없을까? 중국이 북한에 경제원조를 할 수 있다면 한국과 손잡고 동북아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없을까? 만약에 중국이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은 백교수한테 한 질문이다.

김성철:

내 질문은 선즈화 선생께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 특히 일대일로가 전개되면서 왜 주변국들이 불안해졌는가. 이것이 과연 정당한 불안일까, 아니면 허상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어떤 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 집중되어 중국이 다른 정책을 취할 때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둘째, 그런 작은 나라가 정치적 투명성이 약하여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중국의 간섭이 더해지는 경우, 셋째,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주변국에 접근할 때 그 방식이 다자적인 방식이 아닌 양자적인 원조의 방식이 될 경우. 그런 세가지 면에서 중국의 주변국을 볼 때, 예를 들어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베트남의 경우는 무역 면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증대되었지만 양자적 원조는 상당히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중국으로부터 취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중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보다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역 집중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치적 투명성이 높고 중국으로부터 양자적 원조를 받을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위협의 성격도 직접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각국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내 질문은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일대일로를 선포한 지 5-6년

이 되었는데, 중국이 일대일로로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2017년 베이징포럼에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협력, 발전, 빈곤퇴치 같은 개념들을 썼는데, 그 외에 중국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선즈화:

현실문제에 관한 질문은 류밍 교수가 답하기로 했던 것 같다. 일대일로의 배후에 어떠한 전략적 계획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다.

류밍:

밖에서는 일대일로를 마샬플랜에 견주어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채무 함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일대일로에 대한 주된 비판인 것 같다. 중국으로선 당연히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우선, 일대일로는 전략이 아닌 구상이다. 물론 이는 관변의 입장이다. 내가 보기에, 중국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일대일로는 시장의 확장과 자원의 확보라는 요구와 맞물려 있다. 즉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돌파구이다. 또한 중국이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필요와도 맞물린다. 둘째, 중국 입장에서도 협력할 파트너들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앞서 신냉전을 언급했는데, 신냉전이 왜 오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중 간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영 간 대립도 없다는 것. 중국은 미국에 맞설 실력도 없다. 중국의 외교 방침에서는 제3세계 국가가 중국 외교의 핵심이다. 따라서 미국의 주변국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협력관계의 확대는 당연히 경제협력부터 시작하는데, 중국인에게는 길부터 닦아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도로가 깔리면 무역 왕래가 빈번해지고 런민비 사용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에 의존하게 되면 안보, 정치 면에서도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이들 국가의 국가 전략이 중국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다. 나는 이를 단순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 생각에 서방국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대' 보다 '일로' 일 것이다. 즉 해상 실크로드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 미얀마,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 항구를 사들이고 있고 남중국해에 인공섬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는 안보적 함의(security implication)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동맹국이 안보적 해석(security interpretation)

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션즈화:

만족스러운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교수의 발언을 들어보자.

손인주:

션즈화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저 역시 중국측에 질문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한다. 션즈화 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다. 그 중 한국이 중국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작년에 서울대에 와서 중국 정치외교를 가르치면서 얻게 된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안보 위협도 있고 경제 위협도 있지만, 한국 학생들에게는 포용적이지 못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의 최근 몇 년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 국내 정치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다. 언론 탄압이나 사상의 자유의 억압 같은 문제에 대해 촛불시위에 나가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중국은 국제적으로는 다원화, 다자화, 조화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국내정치는 전혀 반대다. 그러니 아무리 중국이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주장을 해도 믿기가 어렵다. 안과 밖의 모습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정치에 대해 중국이 꼭 민주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사람도 많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중국에 안 맞으니 중국만의 독특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어떤 정치든 운영에 있어 좀더 관용적, 포용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한국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첫번째 질문은, 미중관계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매우 강경한 정책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대해 중국의 엘리트나 일반 대중들은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것으로 보는가. 다시 말해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은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가. 며칠 전 하버드의 로버트 푸트넘(Robert Putnam) 교수가 방문하여 이야기하기를, 한달 간 자신이 중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근본적인 변화라 본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와 상관없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책을 펼칠 거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두번째 질문은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만약 개혁개방을 5년, 10년 뒤에 할 경우, 북한이 점점 미국에 가까워져 친미국가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중국이 정말로 심각하게 하는가이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서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중국은 여기에 우려와 두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다.

선즈화:

좋은 질문이다. 순서에 따라 동지에 교수가 먼저 대답해 주길 바란다..

동지에:

한국 학자들이 일대일로 배후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이나 물었는데 나도 한 가지 반문하고 싶다. 한국 학자들은 일대일로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부 한국 학자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부상을 넘어 중화문명의 부상을 도약시키고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과연 한국 학자들은 일대일로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가, 아니면 경제, 정치, 문화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손교수에게도 질문이 있다. 손 교수가 G2 신냉전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손교수는 동아시아의 거버넌스를 보다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즉 다원적인 가치관들이 공존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런 이상적인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가이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하지 않을까? 만약 충돌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손 교수는 한국 같은 중견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한국의 행동은 어떤 것이 될까?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온다면 동아시아가 어떤 모습이 될까? 주도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이 될까? 한중 사이에 공동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을까? 한중관계가 사드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례가 이 문제를 설명해 준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가 역사에 관한 기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 역사학에서는 기억에 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신옥희:

선즈화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동지에 선생님 질문하신 한국사람들은 일대일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류밍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저는 중국위협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위협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잡힌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왜 중국에 위협을 느낄까를 생각해보면 약간 막연한 것 같다. 중국이 워낙 힘이 세지니까 세력 전이(power transition)에 대한 상당히 추상적인 반응, 즉 굉장히 큰 행위자가 옆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긴장인 듯하다. 한국은 당연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북한과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탓도 있겠다. 그리고 손 교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은 여러 내부적인 정치과정을 민주화를 포함해서 거쳐왔는데,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이념이나 정치체제적인 특성이 우리와 다르다는 느낌이 주는 불안감도 중국위협론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 나는 위협인식이라는 것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하나는 정말 위협적인 본질적인 차원, 둘째는 만들어지는 위협, 즉 구성적인 차원, 세번째는 도구적인 차원, 즉 어떤 하나 또는 복수의 나라가 특정한 나라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위협론에는 이 세가지가 다 있다. 어느 정도는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정치결정자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의도를 위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질적, 구성적, 도구적인 것이 어떻게 섞여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아까 백교수가 말한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정말 위협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사실 사드문제 이후이다. 사드배치 이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 조치가 훨씬 더 길게 지속됨으로써 한국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한국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도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 측면이 모두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들은 분명 위협을 느끼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들도 다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는 지나치게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중국이 거의 따라왔고, 전자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았다. 제 아내가 얼마 전 아이패드를 샀는데, 애플이 아니라 화웨이를 샀는데 성능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한국사람들이 느끼는 미시적인 차원의 위협이다. 그렇지만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대일로와 동북아, 중국의 동북지방 혹은 북한과의 접경지역과의 협력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일대일로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동지에 선생의 질문에 대해, 내 생각에는 류밍 선생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일대일로는 전략이 아닌 이니셔티브이고 세가지 측면이 다 있

다.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우선적인 면은 역시 과잉생산의 해결, 자원확보 같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둘째, 조심스럽게 중국이 위구르나 신장, 티베트를 비롯해 국내를 통합하려는 면에서 서쪽을 강조하는 일종의 서진정책(westward-policy)의 일환으로 일대일로가 작동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셋째, 셴즈화 선생 말씀하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니 중국이 대응전략을 하는 면이 있다. 중국위협론을 중국은 중국포위론이라고 보고 있잖은가. 중국포위론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으로서의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한다.

류밍 선생께 드리는 질문은 조금 상식적일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비핵화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중국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 아까 말씀 드렸듯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정세 전환의 상황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첫번째 질문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사에 대해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이 정말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다.

이상숙:

셴즈화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하고, 동지에 교수가 질문하신 일대일로에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개인적인 리더십은 분명히 약하다. 후계자로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연령도 훨씬 어리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군을 강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도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은, 특히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군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초기에 군의 여러 엘리트들을 이동시키거나 숙청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는 많이 알려진 사항이다.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가 어떠한 질문을 주셨는데,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당과 군부와의 관계로 말씀 드리겠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군 관계자들이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지금은 아니며,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도 군 출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도 처음으로 내각의 박봉주 총리가 부위원장으로 들어갔다. 이런 점은 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김정은은 개인적인 리더십으로 군을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이라는 조직을 정상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당이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5년 당 창건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김정은의 확고한 대내적 위상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군부에서 제2인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군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인사 이동 시키면서 김정은의 자기 권력을 강화해온 것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한 마디만 드리면, 신교수님이 말씀처럼 경제적인 것부터 대미전략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는 혹은 미국과 교류하는 한국 학자들의 생각 중 하나는 일대일로에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보급, 확대시키려는 목적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어떤 가치를 표방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경제발전 경로로 봤을 때 베이징 컨센서스란 권위주의 체제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변국가들에게 보급한다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이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 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백지운:

선즈화 선생님 질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의 반중감정은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떼면 한국증시가 예전에는 미국이랑 항상 같이 갔다.. 이를 커플링(coupling)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반면 중국과 커플링 상황이 생겨났다. 지금 미중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타격을 받으니 한국증시도 같이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위축되거나 타격을 받으면 한국도 따라서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위협론이라는 것은 자기 살을 파먹는 모순적인 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었던 것이 한국이고, 앞으로도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경제가 더 발전한다면 한국은 그에 따른 혜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반중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이었다. 주변에 있는 일본, 홍콩, 몽골, 베트남 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반중감정이 없었던 것에 가깝다. 이런 한국에서 최근 1-2년 사이 반중감정이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중감정을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위협론과 차별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많은 관련된 나라들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 철도 깔아주고 길을 닦아주니 마음 속으로는 다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의존도가 커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보복을 받게 되면 그 충격 또한 클 테니까. 정치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두려워한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중

국의 자본을 원하면서 그에 대한 반감도 같이 커지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일대일로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경제 발전으로 국가 관계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듯하다. 특히 동북아를 보면, 이제까지는 일대일로에서 동북아가 빠져있었지만 한반도 상황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여러 계획들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의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일대일로를 동북아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동안 창지투(창춘-지린-투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북한 문제로 가로막혀 힘을 못 받았다.. 이제부터는 타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일대일로의 동북아회랑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연결시키는 게 관건인데 한국 정부도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는 경제발전 외에 공통의 가치, 이념이 필요하다. 동지에 교수 말처럼 특히 동북아는 역사 기억이 가장 복잡한 곳이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건너뛰고 오로지 철도 까는 것으로 지역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북한이 다 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고 일본과 한국 같은 중형 국가, 그 다음에 더 작은 경제규모의 소국들이 있다. 이들이 대등한 국가간 관계여야 하지만 또 대국과 중소국의 다른 역할분담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관계가 복잡하여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어렵지만, 누군가가 주도를 하려면 주변 국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지점에서 역사기억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지역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선생님들께 북한 개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다. 중국에서도 동북3성의 경제가 일어나려면 북한이 열려야 한다. 북한은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어떤 방식이든 개방을 할 것 아닌가. 최근에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지 싱가포르나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할지 논의가 분분하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몽골이나 베트남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한다. 북한도 비슷할 것 같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자본의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로:

선즈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대답하고 제 질문도 간단히 하겠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비관적인가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짧게 말하다 보니 결론만 말씀드렸던 것 같다. 중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조건이 달라질 것이다.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느 단계까지 협력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북한은 경제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약간의 협력만 들어가도 북한의 경제는 많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일시적인 성장은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그런데 일단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고, 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북한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만한 환경이 장기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 내부적으로 보면, 법이나 제도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시장경제 관련하여 엘리트들 잘 가동하여 페이퍼상으로 많은 정책들 만들어냈고, 내각책임제나 내각중심제, 기업책임관리제 등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기준이나 지도하는 관료들 수준을 보면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도 한 8년 전쯤 중국쪽 기관을 통해 북한의 관료들을 교육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시장이나 경제, 경영 부분에 있어서 관료들은 지식이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막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이상의 맨파워는 없다. 특히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 점에서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0일 발표한 경제 올인의 정책 이후 분위기는 달라지는 듯하다. 최근 평양의 봄 행사로 북측에 다녀오신 분들도 북한이 모든 것을 경제에 걸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 가 보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고속 발전을 하자는 슬로건이나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분위기는 조금씩 형성되는 듯하다. 다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적어도 대학 차원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남북 합작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 경영 대학 같은 것을 독립적으로 설립하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양성해야만 시장경제든 경제 발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지역별 자립갱생 체제라는 것이 효율적인 교환시스템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쟁 위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전혀 바꿀 의사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 투자나 정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 부흥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

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통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접촉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는 한국의 보수층들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도 그런 비판들이 나왔다. 그러나 저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너무 근거 없는 비판인 것 같다.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북한이 한국정부의 통일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한국정부의 남북연합이라는 방안에 북쪽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말로 거의 화답을 한 상태이니까. 셴즈화 선생께서 정치체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없는 공조체제다. 일국양제 같은 형태의 시스템이다. 남북연합이란 그런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북쪽도 연방제로 가기 전에 낮은 단계의 공조를 해보자는 쪽이고, 그 지점에서 양쪽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평화 프로세스가 조금 더 성숙된다면 이제부터 남북간에 통일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지금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남북간에 그런 연합제 통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 등 제도적 준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되어 있다. 단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간에 회담이 잘 안 된다. 지금 남북간에 국회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많은 보수적인 분들은 이를 우려한다. 국회회담이 잘 되면 이를 다른 기구들과 합쳐 연합제 정부를 선언하고 1단계 통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한국 정부가 원래 추구했던 통일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조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탈북자를 조사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조사다. 여기 와 있는 탈북자를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북한에서 새로 탈출한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서 조사하는 방법이라서 북한의 최근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다. 매년의 조사만 보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10년 동안의 흐름과 추세를 보면 의미 있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 김정은의 지지도에 대해 우리가 매년 물어보는데, 올해 조사에서 71% 정도가 나왔다. 작년에는 63%였다. 정상회담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와도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65%였다가 70% 정도로 갔다가 최근 다시 떨어졌다 올랐다 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긍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작년에는 65% 정도가 긍지가 있다고 했고 올해는 70% 정도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40%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여기 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료이다. 저희가 대략 150명 정도를 찾아서 조사하고 있다. 이를 10년 트렌드로 그리면 상당히 재미있고 안정된 흐

름이 나온다. 우리 조사 자료가 노동신문에 세 번 정도 게재되고 인용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남북간에도 이런 조사나 자료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너무 민감한 자료는 빼더라도, 예전에 한번은 북한 학자들 앞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북한 안에서도 이런 자체 조사를 위한 응용사회학 같은 것을 준비도 하고 최근 3년간은 이에 대한 강의도 하는 추세인 것 같다.

아까 셴즈화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반문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기보다는 중국이 큰 나라이니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친중으로 기울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미국과는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 갈등이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관계가 없는 중국은 뭔가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최근엔 여러 분들이 언급한 사드로 인한 실망이 컸다. 예전에 마늘 파동도 있었고, 하드파워로서는 중국이 대국이라고 모두 느낀다. 그런데 대국답게 소프트파워도 지니는 그런 대외정책을 취하면 좋겠다. 사드에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걸 중국이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즉 명분은 북한에 대한 방어지만 결국은 미국의 요구가 있고 그걸 조정할 능력이 한국이 어떻게 있겠나. 그런 사정을 중국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한국의 사정을 중국이 이해한다, 다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협력을 해 달라는 식으로, 약간은 대국적인 소프트파워를 발휘해 줬다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했을 것이고 중국에 대한 인상도 크게 좋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 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은 시장 경제교육이나 경영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북한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분단의 주 원인은 소련과 미국에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한반도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기여해 준다면 통일한국에서 중국의 위상도 당연히 높아지지 않을까.

사실 중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며칠 전에도 중국의 협력을 받아 김일성종합대학과 서울대학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물론 한국이 요청해서 중국이 협력과 중재를 해 주는 것이지만, 중국 쪽에서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주춤할 때 적극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도 하는 교량 역할을 하면 좋겠다. 남과 북이 다이렉트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경제, 경영 교육을 받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남북의 협력이나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돕는다면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량즈:

우선 손교수의 질문에 답변하고 싶다. 지금 중미 간의 긴장 상태나 트럼프의 중국 정책이 일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이다. 우리 생각은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록 ‘트럼프 현상’ 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본인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오랫동안 한미관계를 연구해 온 입장에서 나는 동맹 간의 신뢰 문제에 주목해 왔다. 이번에도 한미동맹 간에 신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재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한국인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한국 학자들은 대북제재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류밍:

질문이 많았는데 중 기억나는 것 위주로 몇 가지만 답변해 보겠다. 첫째, 신교수의 질문인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다. 과거에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부시 정권 때 철수시켰다. 그러나 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상시로 한국에 입항한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육지에서의 핵무기뿐 아니라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도 핵무기가 출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좀전에 백교수가 북한의 개혁개방이 준비되었는지 물어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북한의 체제 특성상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전면적인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백지윤:

내 질문은 중국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나 형태에 대해 연구나 토론이 있느냐는 것이다.

류밍:

토론은 있다. 동북지역의 지린대학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토론해 왔다. 그러나 나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동북지역의 개혁개방이 많이 뒤쳐지고 있어 일대일로와 연결한다고 발전이 되는 건 아닌 듯하다. 이는 동북지역의 국영기업의 낙후, 영도체제의 부패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북한을 일대일로에 편입시켜도 동북지역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몇 년 전 국무원에서 동북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검증해 보니 경제발전에 별 효과가 없었다. 상하이 시 부서기를 그쪽에 파견했는데 그의 비서가 동북에 만연한 부패에 대해 증언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 규모도 작아 일대일로가 연결되어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도로 연결은 할 가치가 있다. 만약 미국이 반대하지 않고 유엔제재도 풀리면 단둥과 북한, 시베리아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낙관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대규모로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북한 사람들의 사상에 변화를 일으킬 텐데, 줄곧 우민정책을 펼쳐온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사상의 개혁이 없으면 북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중국이 대국다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 최근 몇 년 중국이 많이 거만해진 것이 사실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사드문제 처리에서는 한중 양국이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대방의 우려에 대해 역지사지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션즈화:

지금의 중미 대결이 일시적인 현상인가에 대해, 미국에서 미국학자들의 생각을 접해볼 수가 있었다. 대략 세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가장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경제와 무역마찰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해결하기가 쉽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문제이다. 즉 중국의 대외 팽창이 미국의 대외 전략상의 경계와 반감을 산 것으로 이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도의 대립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고 본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미관계이다. 내가 보기에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게 기회만 준다면 미국의 품에 안길 것이다. 김일성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당시 중국도 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과 손잡는 것을 택했으니까. 북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다. 방금 이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가치관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회주의 가치관을 선전하는 홍보물이 널려 있다. 사회주의 가치관이 무엇이나? 자유, 평등, 공평 등등이다. 헛소리처럼 들리지만 중국 전통문화에서 말하는 대동세계가 사실상 이런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와 인류문명 발달의 시각에서 본다면, 인류에게는 공동의 가치관이 존재한다. 다만 목표를 실현하는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다. 현대사회 발전의 역사과정을 보면 공통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적 요소를 얼마나 많이 흡수했나. 중국인도 농담조로 중국에 사회주의가 어디 있냐, 진정한 사회주의는 미국, 일본, 유럽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는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백지운: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듯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론이 나거나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이 첫 회의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갈 테니, 만족스러운 부분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긴 시각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리라 생각한다. 아쉽지만 긴 시간 동안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저녁식사 이후에도 뒷풀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오늘은 늦게까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다. 임경훈 원장님이 늦으시니, 김성철 선생님께서 간단히 폐회사를 해 주신 다음, 약속하게나마 준비한 선물 증정을 하겠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지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한중 양측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서울대-華東師範大學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第一屆 中韓和平合作論壇

통일 한반도 시대의 한중관계

統一半島時代的 中韓關係

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09:5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



